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26
----------	-----

제출연월일 : 2009. 1.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등).
- 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 다.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11. 7. ~ 11. 27.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지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화장시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묘지의 재개발사업
3.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4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 허가신청)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 허가대상) ①공설묘지 및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묘지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무연고자
2. 공설 화장시설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시장이 화장시설의 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관외거주 사망자 또는 외국인 사망자

②공설봉안당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유골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3. 사망당시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중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4.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당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5. 부부 중 1인이 기존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사용신고시 신용카드 또는 수입 증지요금계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관외거주 수급자는 관외사용료를 적용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5.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제10조(사용기간)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공설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사용면적) ①공설묘지의 1기당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봉안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봉안묘지를 제외한 분묘 1기당 면적중 합장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분묘의 면적을 가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의 승계)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순에 따른다.

제13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설묘지·공설봉안당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공설묘지·공설봉안당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연고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권을 득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손괴하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운영 등) ①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예산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상황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1조(시 보존묘지등의 지정) ①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시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대전광역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시 보존묘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3.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민장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공설묘지 (봉안묘지)	대전광역시공설묘지 (구봉산가족묘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61(괴곡동)
공설봉안당	대전광역시공설봉안당 (구봉산영락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61(괴곡동)
공설화장시설	대전광역시공설화장시설 (정수원)	대전광역시 서구 명암2길 88(정림동)

[별표 2]

장사시설별 사용료(제7조 관련)

1. 공설묘지 (단위 : 원)

사 용 료		비 고
기 준	금 액	6.6㎡는 363,000
1㎡당	55,000	*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대전광역시민과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이나 무연고자로 한다.

2. 공설봉안당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료	비 고
유연유골	관 내	15년	200,000	※ 15년 단위로 연장가능
	관 외		400,000	
무 연 유 골		10년	50,000	

3. 공설화장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5세 이상	관 내	1 구 당	60,000	
	관 외		300,000	
15세 미만	관 내	1 구 당	50,000	
	관 외		150,000	
개 장 유 골	관 내	1 구 당	30,000	
	관 외		90,000	
죽 은 태 아	관 내	1 구 당	25,000	
	관 외		70,000	
유 품	관 내	1kg당	2,000	
	관 외		6,000	

4. 봉안료 : 공인된 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서 등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정함



#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 2. 5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 1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 20

다.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 2. 5)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조정례)

####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씀(안 제2조 내지 제3조, 제6조, 제10조 내지 제11조 등).

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제12조).

다.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1조).

###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을,
- 안 제2조는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지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의 강구 등 장사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는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해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을,
- 안 제4조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시설사용 허가신청 및 대상을,
-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사용료의 납부반환면제에 관한 내용을,
- 안 제10조는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1조는 공설묘지의 1기당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등 사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사용권의 승계, 소멸 및 양도금지에 관한 내용을,
- 안 제14조 내지 제15조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개장 또는 원상회복 등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변상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관리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 안 제19조는 위탁업무의 이행여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0조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 안 제21조는 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신청·기준·지정  
서 교부 등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0조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 부칙으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제4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25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장사시설 용어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사태”를 “죽은태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장사시설 용어의 정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조례내용을 삭제·정비하였으며,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인 무의탁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 등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삭제한 후 이를 조례상의 면제대상과 통합하여 상향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또한,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경우로 6개월 이상 관내거주 연고자에 부모와 자녀외에 “배우자”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와 약칭을 정비하여 대 시민 장묘서비스 증진을 도모코자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IV.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